

# 국민 성금을 정부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재해구호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올해로 창립 60돌을 맞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오랜 세월 각종 재난재해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이웃들을 돕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재해구호협회 이사진과 배분위원들은 이런 뜻있는 활동의 한 모서리를 맞닿고 있는 것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분위원회 임명 조항, 사업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 등 개정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가 희망브리지를 산하 기관처럼 만들려는 의도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법 개정의 한 이유로 저희 이사진과 배분위원들의 전문성과 투명성 부족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모욕감마저 느낍니다.

국민 성금은 결코 세금이 아닙니다. 국민 의연금의 모집과 관리, 배분에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민 성금을 정부가 예산처럼 사용하고, 국민이 낸 귀중한 성금을 선심용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해구호협회는 그동안에도 의연금품 배분, 회계 감사 보고 등 모든 업무를 행안부와 일일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법안이 각종 독소 조항을 삽입해 희망브리지를 정부 산하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민간 중심 구호 활동의 큰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각종 재난재해는 날이 갈수록 위력이 강해지고 종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 가지 재난만이 아니라 복합재난 성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일은 이런 각종 재난재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일입니다. 재난재해 응급상황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 매뉴얼 정비, 재난 구호물품의 물류·보관 시설 확충,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보살핌 등 정부와 희망브리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법안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난재해 극복 방안을 놓고 정부와 희망브리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간곡하면서도 단호히 요청합니다.

**첫째, 국민 성금을 정부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둘째, 필요하면 정부, 재해구호협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법안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기회에 재난재해 극복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관 협력 시스템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저희가 충심에서 드리는 고언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및 배분위원 일동

